

송영길 “2일 검찰 자진출두”

검찰 “와도 조사 못받아”



오더라도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도 해야 하고 압수 수색 대상자가 송 전 대표 말고도 많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봐서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출석한다고 조사가 되지 않는다. 우리 일정보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날 29일 송 전 대표의 주거지 및 후원조직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날도 경선캠프 수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송 전 대표가 세운 정책연구소인 ‘백

고 시는 문제 연구소가 의뢰 후원조직으로 가능하며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선거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경선 캠프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절차상 이제 압수수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오는 2일 중앙지검을 방문한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꼭 가겠다. 현장에 기자들이 있을 테니 수사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를 받지 못해도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에게 현재 의혹과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4일 프랑수아 파리에서 귀국한 뒤 25일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일정 상 아직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라”며 출석 불가를 통보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9400만원 이상이 살포된 정황이 포착된 이상, 즉 플러스 알파(+) 자금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귀국 전인 지난달 22일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뉴시스

“송영길 탈당… 윤관석 이성만 선택지 많지 않아”

민주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 자금이 오고갔다는 돈봉투 의혹에 관련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신임대표단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성국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원내대변인, 박광은 원내대표,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 주요 원내대표단 인선… 계파색 열은 범조 출신 중용

운영수석에 송기현 의원
원내대변인에 김한규
이소영·홍성국 의원
비서실장에 민병덕 의원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비서실장 등 주요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가 견고한 통합을 기치로 내건 만큼 계파색이 열은 의원들이 다수 포진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사와 변호사 등 범조인 출신을 중용한 것도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동관 브리핑을 통해 송기현 의원을 운영수석으로 지명하고 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홍성국 의원, 비서실장은 민병덕 의원이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담대한 변화, 견고한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라고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의 인선은 비교적 계파색이 없다는 평을 받는다.

운영수석을 맡은 송 의원은 지난 대선 이광재 캠프에 몸을 담았다가 이광재 당시 후보와 정세균 당시 후보가 단일화하자 정세균 캠프로 적을 옮겼다. 이처럼 송 의원은 비이재명계로서의 행보를 보였지만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주요 인물로는 꼽히지 않는다.

김사 출신인 송 의원은 지난 대선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

원내대변인을 맡은 이소영 의원은 지난 대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원장대변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언급보다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에 매진해왔다. 이 의원은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 패배 뒤 비상대책위원을 맡기도 했다.

또다른 원내대변인인 김한규 의원은 전 대통령 청와대 정부비서관을 지냈으나 국회 입성 이후 뚜렷한 계파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의원 역시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다.

신설된 원내경제대변인으로 지명된 홍성국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시절 당의 경제대변인을 맡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 전 대표를 도왔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의 당에서도 당내 경제위기대응센터장과 민생위기대책단 간사 등으로 기용되며 ‘이낙연계’로 보기 어렵다는 평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민병덕 의원은 당내 개혁 그룹인 ‘처럼’ 소속으로 친이재명계로 꼽힌다. 민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다.

박 원내대표가 계파색이 열은 의원들을 대거 기용한 것은 당의 통합 기조를 해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원내대표단은 민주당이 확장적 통합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분들”이라며 “저희가 국민 상대로 소통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확장성을 점점 강화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민주 “14개월 무역적자에 대중 수출 타격…尹철폐외교에 막대한 경제피해”

더불어민주당이 4월 수출입실적 발표 결과 최근 14개월 동안 무역적자를 이어온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철폐 외교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1일 입장을 통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가 무려 14개월째 무역적자의 늪에 빠져 있으니 ‘국가 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했다.

센터는 “한국의 4월 수출은 49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2%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52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3% 감소했다”며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보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4월 수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는 지난해 4월 수출액이 역대 4월

최고치(578억 달러)였던 데 따른 역기적 효과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부조와 수준의 해석만 내놓고 있다. 올 1월 이후 무역적자 규모가 꾸준히 나가고 있다며 전형적인 기적 효과로 자기위안 삼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센터는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이후로 9개월 연속 하락세”라며 “반도체 업황 부진이 전체 수출 경기 부진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수출이 아닌 대안을 실행할 때다. 반도체 가격과 재고에 의존하는 수출 일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들은 “자동차(40.3%), 선박(59.2%) 품목의 의존도는 심화했다. 관공정 성

장 전략은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약화시킨다”며 “자동차 수출에 대한 지원이 기대도 금물이다. 신차효과는 영원하지 않고 미국 경기침체는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 IRA법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센터는 “대중국, 대아세안 수출이 각각 26.5%, 26.3% 크게 줄어든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올 1분기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나라는 한국이었다”며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최전선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패 외교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박광은 민주 원내대표, 노동절 맞아

“주 4.5일제 향해 담대하게”

尹 정부 향해 “사람이 먼저인 사회 조성을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방지법 존중해야
文 정부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더 두텁게 지원”

박광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메시지를 내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방지법을 존중하라. 민주당과 함께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제도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긴박하게 살펴달라는 구조 신호(메이데이, MayDay)와 노동절(May Day)의 이름이 같은 건 우연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들은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터에서 간절한 구조신호가 울리고 있다”며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

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세계 최장 수급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 고질병을 예방,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방지법은 일터에서 허망하게 죽는 일이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정된 법률”이라며 “누구보다 기업과 정부가 앞장서서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노동시간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고도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주일제를 도입한 정당”이라며 “주 4.5일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학부모를 위한 주일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문제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정의·진보당 “노란봉투법 처리하라”

정부여당 처리 미흡조시 직회부 가능성도 언급

진보 성향 정당들이 1일 제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직회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총교단체 다짐대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지난 2월21일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2008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故) 배달호 열사가 손배와 가압류에 못 이겨 생을 마감한 지 20년, 2009년 사회적응자 노동자들의 비극이 시작된 지 14년만의 일”이라고 운을 폈다.

이어 “대한민국은 헌법에 노동권이 존재하고,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 모두 비준한 나라이지만, 명목상 노동인권법만 있을 뿐”이라며 “행의 때때로 반복되는 수백억, 수십억원의 손배가압류는 민주국가의 기본권이라 할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결국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는, 노동인권법이 우리를 살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비극을 막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며, 세계명령국의 기준인 노동자 노예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도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위협까지 한다. 이 법의 어디에 위헌성이 있다. 노동권은 헌법상의 구체적 권리로 법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원청과 하청 사용자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CJ 대한항공 판결 등도 그러한 모두 헌법을 무시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우리 시대 핵심적 자유인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 법에 대한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에 대한 거부라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한노위 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법사위가 계속해서 심사를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루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을 갖고 있다. 이제 국회 한노위는 그 조항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투쟁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압도적인 본회의 처리를 추동해야 하며 최종 국무회의 통과까지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은 노조법 2·3조 개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유린할 뿐 아니라 노동자를 노예정권으로 규정하고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윤석열 국민의 힘 정권에 맞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군산시의회, 새만금신항 관할권 관련 시민 설명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등 새만금 현안사안에 대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펼치고 있다.

김영일의 의장은 지난주에 이어 민방위 본 교육과 2023년 공중·식품 위생업소 영업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직접 찾아가 전라북도의 방관으로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선(先)관할권, 후(後)행정구역’을 들고온 김제의 도반은 외면한 채 알맹이 없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만 의처제는 전북도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비난하고,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할권 분쟁을 잠재우야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알맹이 없는 통합 방안을 지양하고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군산=이재훈 기자